

제8부

농협개혁 운동의 성과와 과제

*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월간 한농연”은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후 20년 격동의 역사를 겪어 온 한농연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총 10회 연재되는 “한농연 격동의 20년”은, 한농연 농권운동의 질적 도약을 위한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다. - 편집자 주 -

※ 향후 연재계획

제1부 : 농어민후계자, 우리는 누구인가?

제2부 : 자주적 농권운동 단체로의 재정립

제3부 : 유통사업단과 품목위원회의 운영

제4부 : “WTO Kills Farmers” 세계화에 희생된 뛰어난 농민 이경해

제5부 : 아스팔트 농사의 열기 속에서

제6부 : 대선 후보 농정공약 채택 촉구 운동

제7부 : 농업계 내 사회적 협의기구 추진 운동

제8부 : 농협개혁 운동의 성과와 과제

제9부 : 농축협조합장 및 지방의회 진출 운동

제10부 : 농업경영인, 우리는 누구인가?

농협개혁 문제, 근원을 생각해 본다

현재 농업계의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된 농협개혁 문제는, 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 종합농협이 출범했던 당시부터 출발한다. 식량 증산을 위한 농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어촌의 악성 고리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박정희 군사정부 출범 직후인 1961년에 농업은행과 (구)농협을 통합한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시군, 읍면, 이동) 체제가 만들어졌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군인 출신 초대 농협중앙회장 체제를 구성하고, 단위농협 조합장마저 농협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토록 임시조치법을 제정했다. 한국 농협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농민조합원의 경제사회적 권익 수호를 위한 자발적인 사업체가 아니라, 정부 농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행정 기구의 성격이 애초부터 강했던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식량이 부족했던 시기 증산 위주의 농정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국민소득 증가와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체계로 재편됨에 따라, 복잡해진 농산물 유통과 가격 파동에 기존 농협 체제만으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더욱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으로 농업 개방이 확대되면서 어려움은 커져만 갔다.

그리하여 농협은, 상호금융·정책금융 및 수매제 등 기존의 정책대행 역할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농산물 유통시장을 장악하여 유통자본과 상인 세력을 견제하도록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받게 된 것이다.

한농연 창립 초기부터 참여 속의 농협개혁 운동을 전개

1987년 6·29 선언 이후 민주화의 거센 흐름 속에서, 농협 개혁문제는 본격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88년에는 농협중앙회장 선출제 및 농축협조합장 직선제 도입 등 개혁조치가 도입되었다. 이에 한농연의 전신인 전후협(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은 1989년 2월 23일 '농축수협 조합장 선거에 관한 결의서'를 발표하여, △농어민후계자 전원이 농축수협에 가입하고 △농축수협의 민주적 운영에 적극 참여하며 △단위조합 조합장 선거 출마를 적극 지원하여 조직 위상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전후협은 1990년부터 '협동조합 운동 교육'을 개설·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농민단체 공동 주최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단위농협 및 농축수협중앙회의 조직 개편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의 성과는 1993년 한농연 내 '협동조합발전연구위원회(협발위)'의 설립·운영의 성과로 나타났다.

한농연의 협발위는 단순한 법령·제도의 개혁 문제를 넘어서, 일선 조합부터 시작하는 '아래로부터의 개

혁'을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였다. 단위농협 이감사와 대의원의 역할 및 실무 등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조합의 민주화와 사업운영의 개선을 위한 조합원의 역할과 노력에 대한 고민이 이뤄졌다.

아울러 한농연은 1994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 및 1998년 농림부 내 '협동조합 개혁위원회' 등 각종 개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서 중앙회 및 일선 조합의 각종 개혁과제를 제기하고 관철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한농연 및 농업계의 농협개혁 및 조직 개편을 위한 노력은 1999년 '협동조합 개혁추진 범농업인연대(협개연)'의 활동으로 이어졌는데, 농축협중앙회 통합에 반대하는 거센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진통도 만만치 않았다.

협개연은 △농축인삼협중앙회 통합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철저한 독립사업부제 실시 △자율적인 조합 합병 추진 △중앙회와 일선조합간 사업 경합 금지 △품목·업종별연합회 설립 △축산대표이사는 축협조합장 협의회에서 단수 추천토록 하는 등의 개혁 조치를 반영하였다.

2004년 농협법 개정 및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편 촉구 활동

2000년 7월 통합 농협중앙회 출범으로 1단계 농협개혁 운동이 일단락되었지만, 2001년 쌀값 폭락과 DDA 및 FTA 협상 등에 대응하여 총체적인 농협개혁 요구가 제기되고 있었다. 급기야 2004년에는 파주 교하농협과 구미 장천농협이 농협 개혁을 요구하는 농민조합원의 손으로 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한농연은 2003년 4월 농민연대 출범 당시부터 농협개혁 운동을 강력히 전개했다. 한농연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와 회원농협의 조직·사업·인력 개편을 강조하며, 농협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갔다. 특히 중앙 및 지역별 집회 개최와 만평 자료집 등의 보급을 통해 한농연 회원 및 농업인들의 운동을 추동해 나갔다.

각 지역에서도 한농연 회원과 농업인들이 아래로부터의 농협개혁 운동에 적극 나섰다.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고 강사를 섭외하여 이감사 및 대의원 교육을 실시하는 지역이 늘어났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농협개혁 과제를 합의하여 조합 임직원과 함께 실현해 나가려는 운동이 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확산되었다.

각 조합에서는 상호금융 금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조합원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유통손실보전기금을 적립하거나 농작물재해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불합리하게 지출되던 각종 회의비와 업무추진비를 조정하였으며, 조합 경영실정에 맞는 임직원의 급여 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농협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은 어려운 과제였다. 2003년 7월 세부 논의과제에 대한 갈등이 불거지면서 농협개혁위원회가 파행되어, 농민연대 참여 단체들이 농협중앙회 앞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1구역-1조합' 제도 폐지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았던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내 논의를 거쳐 일부 반영되지 못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 속에서 농협중앙회를 사업대표이사 중심의 운영 체제로 전환하고, 일선 조합의 투명한 경영과 공정 선거 풍토 조성을 위한 조항들을 반영한 농협법이 통과되어 2005년 7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조합원이 주인 되는 실질적인 농협개혁에 집중해야

올해 초까지 농협은 신임 최원병 회장 체제 출범까지 많은 진통을 겪었다. 역대 민선 중앙회장이 사법처리되어 불명에 퇴진 당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정권 교체시마다 농협개혁 문제는 농업계 내외부의 '뜨거운 감자'로 제기됐으며,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농림부와 농협에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흐름은 지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지역의 우수 농축산물 브랜드를 적극 육성하여 농민조합원 실익 증진에 힘쓰는 사업 모델이 각지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믿을 수 있는 국산 우수 농식품을 생산·유통시키는 주체로서, 아직도 국민들은 농협에 대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지만, 실질적인 산지·소비자 유통주체로서 더욱 큰 역할을 농협이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한농연은 창립 20주년의 기간 동안, 농협의 적극적인 주체로서 참여 속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 전국 각지의 농축협 조합장과 이감사·대의원으로 활동중인 한농연 회원은, 이제 왕성한 역량을 지닌 핵심 일꾼으로서 농협의 근본적인 혁신과 우리 농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농연의 씩씩한 농협 혁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한농연의 농축협 이감사·대의원 교육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농협의 주인으로 일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갖추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